

양곡법 상정 '충돌'... “국회법 무시” vs “본회의 직회부”

〈輿〉

〈野〉

새해 첫 법사위 여야 대립으로 파행
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개정안
국민의힘 “법사위 계류된 법안”
야당 “왜 지금 와서 토론” 반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16일 ‘강 대 강’ 대치를 하다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 민주당이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했다고 주장해 결국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자리를 뜨는 파행을 맞은 것.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의해 직권상정됐는데,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상임위 의결 후 60일

이 지났는데, 법사위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것이다. 왜 지금 와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은 최초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법이다. 국회법 86조를 몇 번 읽어봐도 상임위 의결 시,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다음 본회의에 부의하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에 기초하는

국회법 절차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정적식 법사위 여당 측 간사는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법사위가 여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직권상정을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한 법만 상정했는데, 이것이 유일한 예외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직권상정을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이 “법안 자체가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다”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 합의로만 의사 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관련해서 법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21대 후반기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는 지속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도읍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에 반발하고 김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 86조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제적 위헌 5분의 3 이상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법사위 전체회의의 심사대상에 올리면서 이번 여야 충돌이 야기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나경원, 당 대표 출마 결단? 측근 “尹 대통령 순방 이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위원장엔 이재명 대표

측근 통해 출마 의사 공개적 표출
尹 21일 귀국... 이달내 출마 전망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차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측근인 박 전 의원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나 전 대표 같은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할 때부터 출마 의지가 좀 광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그 기간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건 예의가 아니다. 국내 정치 걱정을 하시게 만든다. 그래서 귀국 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순방에 나섰고,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시기가 이르면 21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만 썬이다. 설 연휴 기간과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까지 고려하면 나 전 의원 출마 선언 시기가 1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전 의원은 “본인도 계속 고민해본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과 당원들이 어떤 가치를 필요로 하느냐, 이것이 출마 결심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독립유공자, 무명용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나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세 분의 전직 대통령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말씀드렸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보수의 자랑스러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지금껏 흔들림 없이 정치를 해왔다”며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 투쟁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그렇게 우리는 정권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 2022년 3월 정권교체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만 살 수도 없고 내일만 기다릴 수도 없다. 영원히 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나 전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이 UAE 순방 당시 4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데 대해 “정권 교체와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끌어낸 성과”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어 “큰 성과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건강히 소화하고 돌아오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고려한 듯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행보에 지지까지 표한 썬이다. 이는 친윤(親尹석열)에 대한 공세와 다르게, 윤 대통령은 분리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李 신년기자간담회 구상 구체화
당 내 3개 특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3개 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 3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기구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기도 하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는다. 또한 당내 헌법개정특위는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맡고 경제안보센터 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겸임한다.

안 대변인은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헌법개정 특위는 윤 전 비대위원장이 당 내 중진으로 논의를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경제안보센터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정책위의장이 겸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들을 개시할 것으로 본다. 각

각 기구 성격에 맞게 활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기본사회 위원회는 정책위나 민주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완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등 사회 전 분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당정, ‘초등 늘봄학교’ 3월부터 시범 운영

그럼으로 꾸릴 것이라는 게 당 측 설명이다.

200곳 시범... 2025년 전국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육계 최대 현안인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200곳에 대한 시범 사업이 끝난 뒤 2025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추진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 측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 문제 역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갖고 늘봄학교 및 유보통

합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가운데 4곳, 여기에 속한 초등학교 200개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다.

당은 시범 사업에 필요한 ▲유형별 세분화(아침·저녁·틈새 돌봄)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는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범 학교로 선정된 200곳에 대해서는 지역과 특성에 맞게 모든 권한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 사항에 맞춰 맞춤형 프로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아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책임교육 분야인 유보 통합, 늘봄학교에 대해 “유보 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 늘봄학교는 초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과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영훈 기자